

한국의 對중국 하이브리드전 대응전략: MCDC*의 대응전략 적용을 중심으로

김숙영(합동군사대학교 합동정규과정)**

최영찬(합동군사대학교 전략학 교수)***

논문요약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미래의 전장 영역은 더욱 모호해질 것이며 다양한 전쟁수단은 통합되어 운용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 양상의 변화 속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전쟁의 무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중국은 '중국몽', '일대일로' 등의 정책과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한반도의 새로운 위협으로 판단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변화된 전쟁 양상인 하이브리드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온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인 '초한전'과 '삼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양상을 예측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MCDC(다국적능력개발실험)의 대(對)하이브리드전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하이브리드전, 중국, 초한전, 삼전, 다국적능력개발실험

* MCDC(다국적능력개발실험)는 Multin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Campaign project의 약자·현재 및 미래의 분쟁 양상, 군사 문제 등을 연구하는 단체로 주요 선진국(21개국) 및 국제기구(NATO, EU)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 제1저자

*** 교신저자

I. 서론

지금까지의 전쟁 양상은 기술의 발전이 선도하기도 하였고 새로운 전쟁수행개념이 적용되면서 기술이 이를 따라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전쟁의 양상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은 기존에 생각하지 않았던 획기적인 기술과 새로운 전략 개념을 적용한 전쟁수행방식이었다.

특히, 아레귤 토프트(Ivan Arreguin-Toft)가 분석했던 것과 같이 창의적이고 독특한 전략을 적용한 전쟁수행방식은 상대적인 물리적 군사력이 앞서는 국가와의 전쟁에서 승률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켰다.¹⁾ 이러한 관점에서 호프만(Frank G. Hoffman)이 주장한 하이브리드전²⁾도 획기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써 전쟁 양상의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2015년 돈바스 전쟁, 2021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효과는 이러한 사실을 신뢰성 있게 뒷받침한다.

하이브리드전은 모호한 전장과 다양한 수단이 통합된 전쟁 양상³⁾으로, 중국의 초한전(超限戰), 러시아의 차세대전(New Generation Warfare)과 같이 다양한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다. 하지만, 명칭만 다를 뿐 비군사적 영역과 군사적 영역을 통합하여 전쟁을 수행하는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미래전 양상은 전쟁의 영역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할 것이며,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다양한 침투와 공격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전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도 하이브리드전의 유용성에 주목하면서 중국식 하이브리드전 이론인 초한전과 이를 구체화한 삼전(三戰)을 발전시켰다. 중국은 1991년 걸프전과 1999년 코소보전을 분석하면서 하이브리드전

-
- 1) Arreguin-Toft, Ivan,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 The MIT Press, 2001, pp. 93~128.
 - 2) Hoffman, Frank G.,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Arlington, VA: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 3) Hoffman, Frank G., *Ibid.*

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중국 공군대령 2명이 전쟁 영역에는 한계가 없다는 초한전이란 이론을 제시하였다.⁴⁾ 2003년에는 심리전, 여론전, 법률전을 뜻하는 삼전을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中國人民解放軍政治工作條例)”에 제정하면서 중국식 하이브리드전을 만들어 왔다⁵⁾. 또한, 이를 남·동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에 적용하면서 자국의 이익과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연구는 미국과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국내 연구는 부족했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관한 연구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박창희·송승종·안광수,⁶⁾ 박병권,⁷⁾ 위홍위,⁸⁾ 김재엽⁹⁾과 김남철¹⁰⁾의 연구이다.

박창희와 그의 동료들은 중국의 삼전 위주의 전략과 ‘저강도 강압’이라는 표현을 통해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을 정의하였고, 이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개념을 제시하였다.¹¹⁾ 박병권은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을 살펴보면서 중국의 미래 하이브리드전 수행 전략을 예상했으며,¹²⁾ 위홍위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을 정보전 위주로 분석하면서 대만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과 이에 대한 대만의 대응을 살펴보았다.¹³⁾ 김재엽은 삼전을 중

-
- 4) 차오량(喬良)·왕상수이(王湘穗) 지음, 이정근 옮김, 『초한전(超限戰)』, 서울: 교우미디어, 2021.
- 5) 육군 교육사령부, 『미래 작전환경분석서』, 대전: 육군 교육사령부, 2022, p. 112.
- 6) 박창희 외, “동아시아 국가들의 Hybrid전 대비전략 연구.”,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논산: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20, pp. 1~152.
- 7) 박병권,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수행 전략.”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8) 위홍위,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한 연구 - 양안 정보전 사례와 대만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9)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三戰):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신아세아』 29권 1호, 2022, pp. 94~126.
- 10) 김남철, “강대국들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과 주요 사례.” 『군사학논총』 제11집 제2권, 2022, pp. 3~33.
- 11) 박창희 외, “동아시아 국가들의 Hybrid전 대비전략 연구.”, pp. 1~152.
- 12) 박병권,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수행 전략.”
- 13) 위홍위,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한 연구 - 양안 정보전 사례와 대만의 대응을 중심으로.”

심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에 대한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연구하였으며,¹⁴⁾ 김남철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군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¹⁵⁾ 그러나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관해 드물게 연구된 성과물도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중국이 펼치고 있는 대(對)한반도 하이브리드전의 실용성에 집중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중국의 대한반도 하이브리드전에 집중한 학술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하이브리드전 양상을 분석해 보고, MCDC(다국적능력개발실험)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전략을 활용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개념은 무엇인가? MCDC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전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이 향후 구사할 가능성이 높은 대한반도 하이브리드전 양상은 어떠한 것인가? 중국의 대한반도 하이브리드전 양상에 대비하여 MCDC의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전 대응전략을 적용했을 때 우리는 어떤 전략목표와 수단, 방법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5개의 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초한전과 삼전에 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MCDC의 하이브리드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였고, 제4장에서는 중국의 대한반도 하이브리드전 양상을 남한과 북한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제5장에서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14)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三戰):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pp. 94~126.

15) 김남철, "강대국들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과 주요 사례.", pp. 3~33.

II.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고찰

1. 하이브리드전의 일반적 개념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consensus)된 바가 없으며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여러 학자의 개념을 종합해 보면, 그 주장들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먼저, 호프만(Frank G. Hoffman)은 “국가 또는 정치집단이 재래식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 비정규전 전술과 조직, 무차별적인 폭력과 강압을 동반하는 테러 행위, 그리고 범죄 행위 등의 다양한 전쟁방식을 수행”하는 전쟁으로 정의했다. 또한, 그는 “하이브리드전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재래식 무기, 비정규전 전술, 테러와 범죄 행위를 전투공간을 구분하지 않고 동시적이고 적절하게 융합하는 전쟁방식”으로도 설명했다.¹⁶⁾

켄트웰(Douglas Cantwell)은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켰다. “경제적 압박, 역내 반대 세력의 지원, 허위 정보 및 범죄 행위들의 비운동적(non-kinetic) 군사 수단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상대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하이브리드전을 분석했다.¹⁷⁾

MCDC는 하이브리드전의 범위를 폭넓게 정의했다.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기능 전체에 걸쳐 특정 취약성에 맞춰 다양한 전력 수단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하이브리드전이며, 재래식 전쟁의 임계점 아래에서 정치, 경제, 기반구조, 정보, 군사, 사회 등의 각 취약점을 동시에 공격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¹⁸⁾

16) Hoffman, Frank G., “Hybrid vs. compound war. The Janus choice: Defining today’s multifaceted conflict.” *Armed Forces Journal*, 2009, p. 3.

17) Cantwell, Douglas, “Hybrid Warfare: Aggression and Coercion in the Gray Zone.” *ASIL Insight*, Vol. 21, Issue. 14,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2017, p. 2.

18) MCDC, *MCDC Countering Hybrid Warfare Project: Understanding Hybrid Warfare*,

앞서 논의된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담론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수단, 영역, 방법 측면에서 공통점을 정리할 수 있다.

우선, 수단 측면에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다. 군사적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등 다양하게 사용하며, 군사적 수단보다 상대국의 취약점을 공략할 수 있는 비군사적인 수단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영역 측면에서 전쟁의 수준을 구분하지 않는다. 전술적으로 테러, 비정규전 등을 수행하면서 전략적으로 경제적 압박, 사회적 혼란 조장 등을 이용하여 전장을 구분하지 않고 상대국을 공략한다.

셋째, 방법 측면에서 수단과 영역을 동시에 활용한다. 다양한 수단을 전 전장에 걸쳐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전쟁의 수준을 구분하지 않고 다양한 전장에 걸쳐 여러 수단들을 동시에 활용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며 이때 공격은 그 취약점을 파고들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정의를 다양한 국력의 제 수단을 전 전장에 걸쳐 맞춤형으로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쟁수행방식으로 판단하였다.

2.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이론과 형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은 전 영역을 초월하는 초한전 이론의 실제이자 구체적인 형태인 삼전(三戰)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¹⁹⁾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은 미국의 다영역작전(MDO), 러시아의 차세대전과 비슷한 개념이나, 미국의 다영역작전보다는 비군사적 영역에서의 활동에 더 비중을 두었으며 ‘게라시모프 독트린’으로 불리는 러시아의 차세대전에 비해 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

MCDC, 2017, p. 8.

19)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三戰):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p. 102.

이는 중국과 서구의 전략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는 동양의 병법서인 손자병법과 서양의 클라우제비츠가 저술한 전쟁론을 해석하는 시각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 손자가 “적과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부전승’ 사상을 강조했다면 클라우제비츠는 “오직 전투에 의한 승리만이 진정한 승리”라는 ‘결전 추구’ 사상을 주장했기 때문이다.²⁰⁾ 이에 따라 각 국가의 군사전략이 발전되어 왔는데 서양은 군사적인 수단 위주의 전략을, 중국을 비롯한 동양은 비군사적 수단(외교, 정치, 경제)을 활용한 전략을 수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손자병법의 시계편에서는 ‘병자 궤도야(兵者 詭道也)’라는 구절로 전쟁은 속이는 것임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²¹⁾ 또한 모공편에서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벌모(伐謀, 적의 계략을 분쇄), 벌교(伐交, 적의 외교관계를 끊어 고립), 벌병(伐兵, 적의 군사를 치는 것) 순으로 나열하며 공성(攻城, 성을 공격하는 것)을 가장 하위의 전략으로 보았다. 즉, 적이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없애기 위해 정치, 외교 등을 활용함으로써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최상책으로 판단하고 있다.²²⁾

고대부터 이러한 군사전략을 이어받은 중국은 앞으로도 속임수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정치, 외교, 심리, 정보전을 통해 이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둔 다음, 필요한 군사력을 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연하고 파괴적인 중국의 전략 문화가 만들어 낸 중국식 하이브리드전인 초한전과 삼전은 규범화되고 이분법적인 전략 문화를 갖고 있는 서구를 대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되고 있다.²³⁾ 또한, 중국은 지금까지 국가이익을 취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을 제한하면서 미국과의 직접적인 마찰을 회피하고 분쟁화하는 전략을 취하고는 있으나, 이는 군사력 사용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아서일 뿐, 이를 배제하고 있는 것

20)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pp. 179~180.

21) 노병천, 『도해 손자병법』, 서울: 연경문화사, 2012, p. 36.

22) 노병천, 위의 책, pp. 81~82.

23) Orinx, Kimberly and Tanguy Struye de Swielande, “China and Cognitive Warfare: Why Is the West Losing?” In the NATO-STO collaboration support office Cognitive Warfare: The Future of Cognitive Dominance, France: NATO Innovation hub, 2021.

은 아니다. 중국은 적절한 상황이 조성되면 군사력을 투입하여 원하는 이익을 달성하고자 할 것이다.

(1)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이론: 초한전(超限戰)

초한전은 1999년 공군대령인 차오량과 왕상수이가 발표한 이론으로 기술의 발전, 무기의 변화, 안보 개념의 확장, 전략목표의 조정, 전장 영역의 모호성, 비군사 수단과 비군사 인원을 구분하지 않는 전쟁 범위와 규모의 확대에 의해, 제한을 두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전쟁수행개념이다. 이는 미 걸프전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전쟁 양상을 예측하여 9.11. 테러를 예견함에 따라 집중을 받았으며, 미래의 전쟁은 군사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군사·비군사·초국가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전쟁을 수행하며 제국력요소를 조합하여 운용하는 것이라 주장했다.²⁴⁾

차오량과 왕상수이는 초한의 개념을 한계라고 불리거나 한계로 이해하는 것들을 초월하는 것으로, 물질적, 정신적 혹은 기술적인 것을 초월하는 것이며 심지어 금기라고 불리는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한조합전’이라는 새로운 전법을 역설했다.²⁵⁾

‘초한조합전’은 어떠한 영역, 어떠한 방향의 고유한 경계선을 초월하는 것으로 이미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영역과 방향에서 기회와 수단들을 조합시키는 것이다.²⁶⁾ ‘초한조합전’은 ‘초국가조합’, ‘초영역조합’, ‘초수단조합’, ‘초단계조합’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먼저, ‘초국가조합’은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초국가, 다국적, 비국가 조직 간의 수직·수평·교차된 조합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을 말한다.²⁷⁾

‘초영역조합’은 ‘초국가조합’과 ‘초수단조합’이란 두 가지 개념 사이에

24) 김남철, “강대국들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과 주요 사례.”, p. 7.

25) 차오량·왕상수이 지음, 이정근 옮김, 『초한전(超限戰)』, 서울: 교우미디어, pp. 170~171.

26) 차오량·왕상수이 지음, 이정근 옮김, 위의 책, p. 172.

위치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미군의 '전영역작전'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식이지만 군사적인 분야에 한정된 미군과는 다르다. '초영역조합'은 정치·경제·군사·문화·외교·종교 등 각 영역을 조합하면서 '어떠한 영역이 주전장으로 전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보다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²⁸⁾

'초수단조합'에서 수단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도구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국가부터 군대, 무기까지 모두가 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모든 영역도 수단화될 수 있고, 영역 내 세분화된 분야 역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제원조, 무역 제재, 외교, 문화침투, 언론 선전, 국제법규 등 수단은 각각 정치, 경제, 외교 등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해 있지만 준군사 수단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철학, 과학, 예술 등도 군사적 행동을 보강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수단을 조합할 때 수단의 속성과 윤리 기준의 부합성이 아닌,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경로 원칙'에 부합하는지만 판단하여야 한다.²⁹⁾

마지막으로 '초단계조합'은 국가 또는 초국가차원의 전략이라 할 수 있는 대전(大戰)-전책(戰策)으로부터 전쟁(戰爭)-전략(戰略), 전역(戰役)-전예(戰藝), 가장 기본적인 규모의 작전행동인 전투(戰鬪)-전술(戰術)까지 단계를 임의대로 연결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수단을 전투 임무에 적용한다거나 전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전책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초국가를 주체로 하는 전쟁과 비군사 전쟁에는 초월할 수 없는 영역과 수단은 없으며, 조합할 수 없는 영역과 수단도 없다.³⁰⁾

초한전 이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중국이 미래전을 수행함에 있어서 영역의 구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단을 활용함에 있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자체의 윤리성이나 원칙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이 국가이익 달성을 위해 평상시부터 모든 영역과 수단을 활용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수행하고 있으며 군사력 운용

28) 차오량·왕상수이 지음, 이정곤 옮김, 위의 책, pp. 179~183.

29) 차오량·왕상수이 지음, 이정곤 옮김, 위의 책, pp. 183~188.

30) 차오량·왕상수이 지음, 이정곤 옮김, 위의 책, pp. 188~192.

도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형태: 삼전(三戰)

초한전의 실행전략은 바로 인민해방군의 삼전이며,³¹⁾ 초한전의 등장을 계기로 본격화된 중국의 ‘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이 보다 구체적인 형태를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 삼전이다.³²⁾

중국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주변국과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는 군사 개혁을 추진하면서, 정보심리전이 정치전략적, 군사적으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2003년 12월 중국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중국 인민해방군 정치공작조례(中國人民解放軍政治工作條例)”를 발표하며, “여론전, 심리전, 법률전을 진행하여 적에 대해 와해 공작을 전개한다”고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시 정치사업 중점을 규정하였다. 2010년 9월 중앙군사위원회는 전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정치공작조례’를 개정하였는데, ‘정치공작임무’로서 삼전을 재규정하였다.³³⁾

심리전은 상대방의 의사결정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지도부에 대한 반감 조성 및 적을 기만 또는 전투의지를 약화시키는 활동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은 다양한 국력 요소와 수단을 동원한다.³⁴⁾

여론전은 심리전과 병행하여 수행하는 것으로, 상대국의 여론에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주어 자국의 조치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유도하고 상대국의 행동은 위축시킬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하는 전술이다.³⁵⁾

31) 이지용, “중국 ‘초한전(超限戰)’의 군사전략적 의미와 한국안보에 주는 시사점 연구.” 『신아세아』 제28권 4호, 2021, p. 90.

32)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三戰):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p. 102.

33) 이지훈,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0권 2호, 2014, p. 131.

34)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三戰):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pp. 103~104.

35) 표나리,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3전의 전개: 한국에 대한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2022-10, 외교안보연구소, 2022, pp. 13~14.

삼전 중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법률전은 법률제도를 이용하여 정치적, 상업적 목표를 달성하고, 상대방의 행동반경을 축소 및 행동 환경을 조작하기 위해 시행된다. 국제법, 자국의 국내법, 상대국의 국내법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함으로써 여론전과 심리전 전개 시에 강력한 무기를 제공한다.³⁶⁾

스테판 할퍼(Stefan A. Halper)의 연구를 기초로 삼전을 목표와 수단 및 방법으로 구분하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삼전의 개념

구 분		내 용
심리전	목표	· 상대방의 의사결정능력 저하(방해, 의심 등) · 지도부에 대한 반감 조성 · 적 기만 또는 전투의지 약화
	수단 방법	· 외교적 압박(무력시위, 동맹분열 유도 등) · 소문 및 조작된 허위 정보 유포 · 경제적 위협
여론전	목표	· 인식 및 사고방식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 행사 · 우호적인 여론 유지 및 대내외 대중적 지지 · 상황에 대한 적의 평가 변화 유도
	수단 방법	· 영화, TV 프로그램, 인터넷 및 국제 언론 네트워크 등 모든 매체 활용하여 국내외의 여론 조정
법률전	목표	· 법률 제도를 이용하여 정치적, 상업적 목표 달성 · 상대의 행동반경 축소 및 행동 환경 조작
	수단 방법	· 법을 제정하거나 위조된 법 사용 · 영토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위조 지도 사용 · 국제법 및 국제 협약을 선택 적용하여 법적 왜곡

출처: Halper, Stefan A., *China: the three warfares*, Cambridge, New York: University of Cambridge, 2013, pp. 12~14.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인 삼전은 동중국해 분쟁, 남중국해 분쟁, 대만 해협 분쟁, 사드 배치 및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의 관할권 주장 등 중국의 이익이 걸린 사안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국가이익을 획득하기 위해 비군사적인 삼전만을 활

36) 이지훈,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pp. 130~139.

용한다기 보다는 군사적이지만 비교적 강도가 낮은 수준의 ‘준군사적 강압’³⁷⁾을 통해 자신들의 의도를 강제하고 있다.

동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은 2011년부터 다펬다오(셴카쿠) 일대 해역에 지속적으로 해양감시선을 파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해경국을 창설하여 해경선의 상시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펬다오(셴카쿠) 영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준군사적 강압을 수행하고 있다.³⁸⁾

남중국해 분쟁에서는 해군 및 해경 전력의 강화와 해상군사훈련 등을 통해 상대국들을 압박함으로써 미국의 대중국 해상작전에 대한 의구심과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⁹⁾ 또한, 자동화기와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선박을 보유한 준군사 조직인 해양민병대를 활용하여 타국 주권을 전복하고 자신들의 불법 주장을 관철하는데 활용하고 있다.⁴⁰⁾ 중국은 7개의 인공섬을 건설하였으며 그 중 3개의 인공섬에는 활주로와 격납고, 레이더, 미사일, 탄약저장고 등 군사시설을 배치하였고, 활주로를 건설할 수 없는 작은 인공섬에도 레이더와 통신시설 등을 배치함으로써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였다.⁴¹⁾ 이러한 행동들은 A2AD의 일환으로 필요시 인공섬에 중국의 군사력을 배치하여 즉각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해양경찰의 증강 및 준군사 조직인 해양민병대를 활용하는 것과 더불어 준군사적 강압을 조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만해협 분쟁에서 중국은 대만 봉쇄 훈련과 대만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지속 실시하였으며⁴²⁾, 2024년 2월 대만 관할 해역에서 불법

37) ‘준군사적 강압’은 심리전의 한 수단인 외교적 압박을 위한 군사력 강화 및 과시 등 보여주는 강압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준군사조직 또는 소속이 모호한 무장단체 등이 가하는 압박을 나타내기 위해 새로 정의하였다.

38) 박항기, “중·일간 셴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연구.” 『군사연구』 제139호, 2015, pp. 236~240.

39) 박창희 외, “동아시아 국가들의 Hybrid전 대비전략 연구.”, pp. 68~69.

40) “中, 남중국해서 비정규 해양민병대 ‘리틀 블루맨’ 운용” 『연합뉴스』 2021년 4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3129300009>(검색일:2024.2.21.).

41) “China’s New Spratly Island Defenses.” 『AMTI(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 2016년 12월 13일, <https://amti.csis.org/chinas-new-spratly-island-defenses/>(검색일:2024.2.21.).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사건을 이유로 중국 해경의 순찰을 강화하면서 대만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⁴³⁾

또한, 사드(THAAD)배치 시에는 중러 연합군사훈련을 포함한 무력시위와 전력증강 및 배치 등 군사적인 분야이지만 직접적인 전투력 투사가 아닌 준군사적 강압을 통해서도 한국을 압박하였다. 2016년 서해상에 항공모함 랴오닝호를 포함한 해군 사격훈련 등을 실시하였으며, 중국 환구시보에서는 이를 “사드를 겨냥한 것”이라 보도하며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임을 드러냈다.⁴⁴⁾

한반도 주변 해·공역에서는 이어도를 둘러싼 갈등이 가시화된 이래 정부 기관 소속 선박과 항공기를 동원하여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순찰, 감시를 진행해 왔으며⁴⁵⁾, 한중 잠정조치수역 일대에 군사용으로 추정되는 부표를 설치하고 중간선을 위반한 중국 해양세력(해경, 관공선, 군함, 해양조사선 등) 활동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⁴⁶⁾ 2016년 10월에는 불법조업 중이던 100톤급 중국어선이 단속에 나선 한국 해경의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일도 발생했다.⁴⁷⁾

이는 중국이 삼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군사적인 강압 행위를 병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신뢰성 있게 뒷받침한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단과 방법, 영역에서 한계를 넘어 제국력요소들을

42) “중국군의 대만 주변 대규모 훈련, 기습공격 예고편일 수도.” 『연합뉴스』 2023년 9월 1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063400074?>(검색일:2024.3.11.).

43) “中, ‘어민 사망’ 대만 사고에도 진면 순찰...“더한 조치도 가능.” 『연합뉴스』 2024년 3월 1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5142651083?>(검색일:2024.3.18.).

44) “사드 압박 무력시위? 中, 군사 훈련 이해적 공개.” 『MBC뉴스』 2016년 12월 3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75916_30244.html(검색일:2024.3.18.).

45)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三戰):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p. 116.

46) 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간선은 경도 123도이나 최근 중국은 124도로 이동하여 불법조업을 실시하며 서해잠정조치수역 무실화 행위를 시행하고 있다.(최영찬, 『헨디한 미래전 헨드북』,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2024, pp. 109~111.)

47)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키고 도주한 중국어선 수배.” 『연합뉴스』 2016년 10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9012900065?input=1195m>(검색일: 20 24.3.19.).

다양하게 포함하여 목표를 달성한다는 초한전의 대전제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은 초한전을 근간으로 하여 국가이익을 위해 상시 삼전과 준군사적 강압을 활용하여 ‘싸우지 않고(실 군사력을 투사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을 우선 하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군사력을 적극적으로 투사하는 등의 방법을 조합하는 전쟁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사례 등을 분석하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인 삼전과 준군사적 강압의 주요 수행방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주요 수행방법

구 분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수행방법
심리전	경제적 제재 및 압박
	외교적 압력
	거짓정보 유포
	군사력 증강 및 과시
여론전	미디어를 활용한 왜곡 보도
법률전	국내법 변경
	국제법 해석 왜곡
준군사적 강압	준군사조직(민병대, 해양경찰 등) 활용
	테러 및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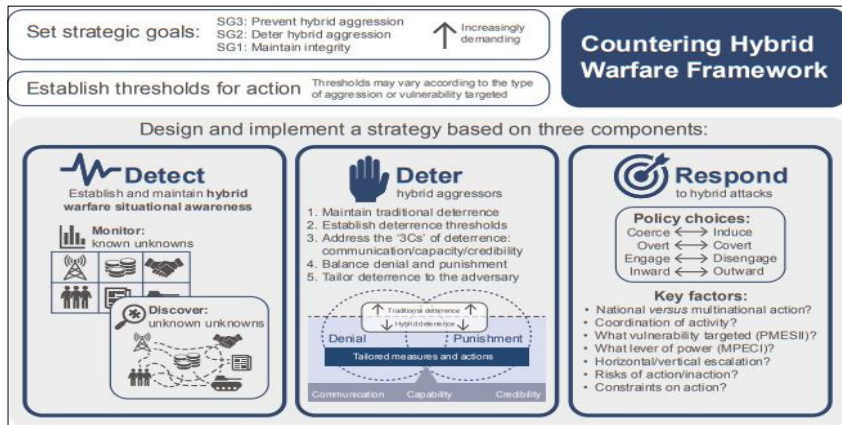
III. MCDC의 對하이브리드전 프로젝트

MCDC는 미국 합참 주도하 주요 군사선진국 21개국과 국제기구(NATO, EU)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분쟁 양상, 군사문제 등을 연구하였으며, 2016~2018년간 대하이브리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적인 전략을 연구하였으며, 중국의 대한반도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론적 틀을 제공해준다.

1. 對하이브리드전 기본 구조

MCDC는 전략목표(Strategic Goals) 설정, 임계점(Thresholds) 설정, 탐지(Detect)-억제(Deter)-대응(Respond)의 절차에 기초하여 전략을 구상하였다. MCDC에서 제시한 대하이브리드전의 전체적인 구조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대하이브리드전 프레임워크



출처: MCDC, *MCDC Countering Hybrid Warfare Project: Countering Hybrid Warfare*, MCDC, 2019, p. 5.

MCDC는 대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목표로 ① 사회 통합 및 기능유지(Maintain integrity), ② 하이브리드 공격 억제(Deter hybrid aggression), ③ 하이브리드 공격 예방(Prevent hybrid aggression)을 정의하였다.

이러한 전략목표를 선정함에 있어 고려할 원칙은 4가지이다. 첫째, 목표설정의 수준을 판단한다.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수행해야 하므로 목표는 정부와 다국적 수준으

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규칙을 기반으로 국제 질서를 보강하도록 고려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공격에 취약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틈새를 강화하고 행동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는 전략적 행동을 안정시키는 규칙과 규범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성공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대하이브리드전을 위한 완벽한 해법이 발견되어 성공하면 적은 다른 더 위험한 방법을 찾을 것이며, 낮은 한계점 설정으로 선불리 대응하면 잘못된 계산과 인식으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넷째, 기습은 피할 수 없다는 가정을 해야 한다. 국가는 목표를 설정하면서 상대의 충격, 기습, 적응과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공격은 진화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목표와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하다.⁴⁸⁾

대응을 수행하는 기준이 되는 임계점은 공격의 종류나 표적에 되는 취약성에 따라 PMESII(Political, Military, Economic, Social, Infrastructure, Information) 분야별로 다양하게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임계점은 적절한 수준을 유지해야 적의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설정한 임계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⁴⁹⁾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기 위한 ‘탐지’, ‘억제’, ‘대응’의 각 절차는 지속적으로 구상, 실행되고 반복되어야 한다. ‘탐지’는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조기경보와 상황인식을 위한 것으로 내부적인 취약성을 식별하고 적의 공격 징후를 감시하는 것이며, ‘억제’는 하이브리드 위협에 각 분야별 회복탄력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고, ‘대응’은 임계점을 넘어선 하이브리드 공격에 여러 수단을 활용해 대응하는 것이다.⁵⁰⁾

2. 對하이브리드전 3단계 대응절차

‘탐지’, ‘억제’, ‘대응’의 각 절차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탐지’

48) MCDC, MCDC Countering Hybrid Warfare Project: Countering Hybrid Warfare, MCDC, 2019, pp. 20~21.

49) MCDC, Ibid, pp. 21~22.

50) MCDC, Ibid, pp. 22~23.

단계는 크게 감시(Monitor)와 식별(Discover)으로 나뉜다. 감시는 적의 실체나 상대가 명확하나 그 상대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활용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국의 취약성 등을 파악하거나 상대국의 정보 수집 등을 통해 위협을 탐지하는 것이고, 식별은 적 또는 상대국이 불분명할 경우 자국 사회 내부의 이상 징후를 식별함으로써 위협을 탐지하는 것이다.

‘억제’ 단계는 3C의 원칙(Communication, Capability, Credibility)⁵¹⁾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같은 형태의 거부적 억제(Deterrence by denial)와 응징적 억제(Deterrence by punishment)로 나누며, 응징적 억제는 대응과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전에서의 억제는 거부적 억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이브리드 공격에 대한 PMESII 분야별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갖추는 것이다. ‘억제’ 단계에서 ‘대응’ 단계로 전환하는 것은 임계점(threshold)이 기준이며, PMESII에 대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수단인 MPECI(Military, Political, Economic, Civil, Information)를 활용하여 맞춤형으로 대응한다.⁵²⁾

MCDC의 PMESII 분야별 하이브리드전 억제 방법을 <표 3>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51) 상대의 이해를 바탕으로 임계점을 오관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소통(Communication), 적의 공격을 탐지, 억제, 대응하는 수단을 개발, 유지하는 능력(Capability), 하이브리드 공격을 억제하고 명확한 임계점을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신뢰성(Credibility)으로 기존의C3와 비슷하면서도 하이브리드전에 적용하면서 일부 차이를 나타낸다.

52) MCDC, *MCDC Countering Hybrid Warfare Project: Countering Hybrid Warfare*, pp. 35~49.

〈표 3〉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거부적 억제 방법

구 분	거부적 억제 방법
정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조직(정당)에 외국자본 제한(금지)을 통해 정치적 의사결정에 영향 방지 • 신뢰 향상을 위해 선거 절차 보장
군사(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억제를 위해 군사력과 국제적 안보협력은 중요 • 국가방위의 기본
경제(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자원의 보장 및 다양성 확보 • 위협에 대한 기업의 상황인식 제고가 중요 • 반부패의 중요성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패는 회복탄력성 약화, 사회 신뢰 저하로 공격에 취약
사회(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자금과 지원을 통한 사회적 분열과 특수 이익집단 활동에 관심 • 교육을 통해 정부와 사회가 하이브리드 위협 활동에 대한 상황인식 강화 • 회복탄력성 구축과 준비를 위한 주민 참여
기반 구조(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비물리적 보호 대책 강구 • 물리적, 조직적, 디지털 기반구조의 안정성 보장 • 비물리적 보호는 법률적, 재정적 투명성, 무역규제 등을 포함
정보(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적 소통이 가장 중요 • 내부적으로 사회를 대상으로, 외부적으로는 공격 세력에 대항하여 시행 • 미디어와 주도적이고 투명한 협력이 핵심

출처: MCDC, *MCDC Countering Hybrid Warfare Project: Countering Hybrid Warfare*, MCDC, 2019, pp. 45~46.

‘대응’을 결정하게 되면 교전 대 비교전(Engage vs Disengage), 내부지향 대 외부지향(Inward vs Outward), 공개 대 비공개(Overt vs Covert), 강압 대 설득(Coerce vs Induce) 등에 대한 정책을 선택하여 MPECI으로 대응한다.

군사(M) 분야에서는 비례성을 보장하면서 잠재적 억제력을 최대화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사력의 전 범위를 활용한다. 정치(P) 분

야에서는 상대국의 정치인사 등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외교관 추방, 국제기구 참여 제재 및 국제기구 내에서의 투표권 박탈 등의 방법이 있다. 경제(E) 분야에서는 경제적 제재와 재정적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민간(C) 분야에서는 공개적 비판과 투명성을 보장하여 사회의 신뢰를 강화하도록 한다. 정보(I) 분야에서는 규정을 통해 언론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지원하여 사회의 신뢰를 증가시키면서, 오보와 거짓 정보는 교육을 통해 대응하고 가용한 법적제재를 가하며 사이버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⁵³⁾

IV. 중국의 對한반도 하이브리드전 양상

1. 중국의 對한반도 하이브리드전 최종상태와 목표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에서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어지는 발판인 동시에 유라시아에서 태평양으로 나아가는 기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해협, 남중국해와 함께 동아시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미국과의 전략 경쟁에 있어 핵심적인 지역이다.

한반도는 중국에게 순망치한(唇亡齒寒)의 위치이기 때문에 국공내전 종식으로부터 불과 1년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6.25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하였으며, 1961년의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 조약』 체결을 통해 북한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⁵⁴⁾

또한, 현재 중국은 아시아 패권 장악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고 전세계 패권을 장악한다는 ‘중국몽’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데,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목표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하지만 중국이 지향하는 한반도의 모습은 우리

53) MCDC, Ibid, pp. 51~60.

54)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三戰):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p. 58.

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한 통일 국가가 아닌 중국 주도의 질서확립을 위해 친중 종속국가로 만드는 것으로, 이는 북한에 의한 적화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친중 정권수립이 전략적 1순위 목표임은 변함없다.⁵⁵⁾

중국의 대(對)한반도 전략은 ① 한반도 안정과 평화 유지, ② 북한정권의 생존과 안정 유지, ③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 ④ 한반도 문제의 현상 유지 및 친중국 성향의 통일이며, 북한의 현 정권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한반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여 남한을 미국과 분리시킴으로써 친중 성향의 통일 한국을 수립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 할 수 있다.⁵⁶⁾

실제로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표방하며 대만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북한과는 동맹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으며, 남한과는 1992년 수교 이후 2008년부터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동맹관계인 북한이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미국과 직접적인 대립을 완충해주는 역할을 해주기를 바랄 것이며, 남한은 미중 패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친미보다는 친중 정책을 수행하는 정권이 수립되기를 원할 것이다. 또한, 최종상태는 친중 정권이 수립된 통일 한국보다는 남북한이 분리된 상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북한의 자치구화를 추구하고, 남한에서는 친중 정권 수립 하에 미국을 비롯한 중국의 반대세력에 대항하기 위한 국가로서의 지위를 지속시키는 방향으로 제반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이 한반도에 바라는 최종상태와 목표가 상이함에 따라 남한과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양상은 달라질 것이다. 이에 대해 對남한 하이브리드전 양상과 對북한 하이브리드전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55) 이지용, “중국 ‘초한전(超限戰)’의 군사전략적 의미와 한국안보에 주는 시사점 연구.”, p. 99.

56) 윤석재,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 평가.” 『합동군사연구』 제30호,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2020, pp. 204~206.

2. 對남한 하이브리드전 양상

중국은 남한을 미국과 분리시키면서 친중 성향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삼전 위주의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것이며, 준군사적 강압은 필요한 경우 군사력 과시 위주로 수행하되, 필요시 시민을 가장한 시위대, 테러조직 등을 투입하여 이익을 얻고자 할 것이다.

남한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로 권위주의 국가와 다르게 개방성과 인권 보장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발달한 미디어 및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개인과 단체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파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폐쇄된 북한 사회보다는 중국의 의도대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은 있으나, 국내 사회의 여론과 국민의 의견인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 정보와 루머 등으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심리전과 여론전을 수행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한다. 접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익명성 등의 보장으로 주어지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취약점에도 모든 정보를 왜곡할 수는 없기에 중국이 의도하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다양한 방면으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심리전으로 중국이 의도한 정책을 유도하지 못하게 되면, 경제적인 압박을 비롯하여 사회 내분화를 위한 의견들을 적극 개진하여 혼란을 유도할 것이며, 친중 정권 수립 및 미국과의 동맹 파기를 위해 자극적인 거짓 정보와 루머 등을 지속 퍼트림으로써 정부와 미국에 대한 반감을 고조시킬 것이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시민단체, 기관 등으로 가장하여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여론전으로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와 중국의 긴밀한 우호관계였음을 강조하며 한미동맹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사드 사태와 같이 한국의 일부 인사들의 중국 지지 입장을 재가공하여 한국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전파함으로써⁵⁷⁾ 한국 사회의 혼란을 유도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적 부작용을 크게 부각

시킬 것이며, 국내 여론 중 중국의 자본을 기반으로 한 언론매체를 확보하여 중국의 입장을 한국 국민들의 의견으로 포장하여 전파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다.

법률전으로는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한미 군사훈련 등을 비난하고 축소하도록 유도하고 서해상의 권리를 확대하여 중국의 서해상 활동 범위를 확보하려 할 것이다.⁵⁸⁾

이에 더하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북한도 일부 가담하여 함께 작전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한미동맹 파기 및 한반도 적화통일을 목표로 이전부터 심리전을 지속해 왔으므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부분적으로 참가함으로써 남한 정권과 미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반감을 고조시켜 혼란을 가중시키려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삼전의 효과가 어느 정도 발휘되어 남한 사회 내의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고 정권 교체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면, 집권 중인 정권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단체로 가장하여 테러, 불법 무력시위 등을 실시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친중 정권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때 테러나 무력시위 등 물리적인 타격을 수행하는 준군사적 강압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전략적인 통제를 실시하여, 남한의 정규군 투입이나 미국 등 제3국이 개입하는 상황은 피하면서 삼전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친중 정권이 수립되면 한국 정부를 통해 한미동맹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전력들을 남한에서 철수시키도록 유도하여⁵⁹⁾ 최종적으로 미국 등 서방의 위협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제거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57) 이성현, “중국의 ‘여론전(輿論戰)’과 언론의 역할 평가: 한국의 사드 배치결정을 중심으로.” 『정책브리핑』 2016-31, 성남: 세종연구소, 2016.

58) 손한별, “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한국국가전략』 통권 제13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p. 125.

59) 허동욱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미국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자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다. (허동욱,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전략』, 성남: 북코리아, 2013, p. 191.)

남한에 대해서도 중국의 자치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는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같은 '차세대전'의 양상은 새뮤얼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예견한 바⁶⁰⁾와 같이, 동일 문화권(인종, 언어, 종교 등)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라는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북한과는 다른 경제체제, 문화, 언어, 민족 등으로 구성된 남한을 자치구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또한, 중국 본토의 피해 없이 대리전을 수행할 완충지대의 역할도 필요하기에 친중 정권 수립이 가장 현실성 있는 최종목표로 판단된다.

3. 對북한 하이브리드전 양상

중국은 북한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며 북한 정권이 불안정사태 등으로 인해 교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정권유지 목적이 가장 큰 북한정권의 의도와 궤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양상은 ① 현재의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 ② 북한 정권 유지에 위협 요소가 나타난 상황, ③ 불안정사태 발생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된 상황으로 나누어서 예상해 볼 수 있다.

먼저, 현 북한 정권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북한에게 친중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원조를 통해 의존도를 높이면서 군사협력 등을 통해 중국이 유일한 북한을 지원 국가임을 주지시켜 주는 정도의 소극적인 심리전을 수행할 것이다.

둘째, 북한 정권 유지에 위협 요소가 나타난 상황에서는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삼전과 준군사적 강압을 조합한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위협하는 상황을 완화시키고 현 북한정권 유지 또는 다른 친중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 여론전으로 북한의 위협 요소가 정당하지 못한 것임을 공표하고, 법률전으로 정권을 위협하는 요소가 불

60) 새뮤얼 헌팅턴은 탈냉전시대에 주요 분쟁은 문화의 차이에서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1990년대 동부 우크라이나와 서부 우크라이나의 차이(언어, 문화 등)를 분석하며 동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병합되는 시나리오를 예상하였다.

법적이라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국의 자국민 안전 등을 내세운 인민해방군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률적 근거 등을 준비할 것이다. 또, 여론전과 법률전을 조합하여 필요시 국제사회에 중국 개입이 정당함을 강조할 것이다. 심리전으로는 위협요소가 해소되기 전까지 경제적 압박을 병행하면서 북한 내부 사회는 북한 정권의 위협요소에 반대한다는 거짓 정보를 전파함으로써 북한 사회가 북한 정권을 보호하면서 위협요소에 반대하도록 선동선전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위협의 수준에 따라 준군사적 강압으로 탈북민 통제를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 대규모 정규군을 북한과의 국경선 일대에 전진 배치하여 즉각적인 투입을 할 준비를 할 것이며⁶¹⁾, 자국민 안전과 경제적 자산 보호를 목적으로 무장경찰 또는 민병대와 같은 준군사 조직을 대거 투입할 것이다.⁶²⁾

이를 통해 중국은 북한 체제 내에서 중국의 지위를 공고히 함과 동시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중국이 원하는 친중 정권이 북한에 수립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정규군 투사가 아니기에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개입을 방지할 수도 있다.

셋째, 불안정상태 발생으로 북한 정권이 붕괴된 상태에서는 중국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법률전과 여론전을 수행하면서 준군사적 강압(정규군 전진 배치, 준군사 조직 투입 등)을 우선하여 조치할 것이다.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내부 사정이 빠르게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언론에 의존하여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삼전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북한정권 붕괴 사태를 축소하고 무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간 수행했던 ‘차세대전’을 모방하여 ‘상냥한 녹색군인 (Polite Green Men)’과 같이 소속이 불분명한 군사조직과 민간인으로 가장한 무장 시위대 및 민병대를 투입함으로써 주요 정부

61) 김창근, “한반도 주변의 회색지대(the Gray Zone) 위협과 대응방향.” 『군사연구』 제149호, 2020, p. 118.

62) 손한별은 2040년 한반도 전쟁 양상의 6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북한 나진·선봉지역 점령을 제시하였으며, 북한 우발사태시 청진, 회령, 온성, 선봉 일대에 대한 점령을 시도할 것이라 예측했다. (손한별, “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p. 126.)

기관들을 점령하여 북한 지역을 자연스럽게 확보할 것이며, 허수아비 정권을 내세워 친중 정부를 수립하거나 더 나아가 중국의 자치구 편입을 주도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 내부의 내전 또는 정치상황 악화 등으로 포장함으로써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개입을 차단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함으로써 중국은 친중국 국가 수립 또는 북한의 중국 자치구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V. 한국의 對중국 하이브리드전 대응전략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연구성과물들을 통해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 방안들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명확한 전략목표가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이브리드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의 부재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기준인 임계점을 설정하며, 그에 맞는 대응방법과 수단을 논의하는 것은 중요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3장의 MCDC(다국적능력개발실험) 대(對)하이브리드전 프로젝트를 적용하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구상하였다.

1. 전략목표(Ends)와 임계점(Thresholds) 설정

전략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상태를 구상해야 한다.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수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상대국과 국제사회의 사회적 혼란을 통해 국가이익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우리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적 혼란이다. 따라서 최종상태는 중국의 사회적 혼란 조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하이브리

드 공격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전략목표는 첫째, 중국의 하이브리드 공격에도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부와 사회기능의 유지, 둘째, 내부적 회복탄력성 강화를 통해 상대의 하이브리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 구비, 셋째, 하이브리드전 공격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이를 제압하는 것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는 MCDC에서 수립한 방어적인 전략목표에 비해 상대의 공격에 대한 동일 혹은 그 이상의 대응으로 적의 공격을 제압하는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는 현재 우리가 처한 첨예한 안보상황과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보에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해 보았을 때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로 판단한다.

다음은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임계점을 설정해야 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지, 억제 수준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판단은 상대의 공격 방법과 공격받는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에 임계점 설정은 매우 어렵다. MCDC도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기 위해 적의 공격 방식과 공격목표의 취약성에 따라 각 분야(PMESII)별 임계점을 설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⁶³⁾

따라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임계점 설정도 PMESII별로 공격 방식과 그 공격이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군사력(M)의 투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된다면 단호한 군사적 대응으로 또 다른 무력 사용을 억제할 수 있으며, 상대의 활동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가하지 못하는 범위로 축소함으로써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63) MCDC, MCDC Countering Hybrid Warfare Project: Countering Hybrid Warfare, MCDC, 2019, pp. 21~22.

2. 대응방법(Ways)과 수단(Means) 설정

본 연구에서도 MCDC의 절차와 동일하게 ‘탐지’, ‘억제’, ‘대응’으로 구분하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화하였다. 또한, 대응 수단은 하이브리드전 특성상 군사력(M)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대응하지 않으므로 PECIM으로 설정하였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인 삼전과 준군사적 강압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응방법과 수단은 다음과 같다.

먼저, ‘탐지’ 단계는 크게 감시(Monitor)와 식별(Discover)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복잡한 안보환경에 처해 있는 한반도의 특성상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을 포함하여 주로 위협이 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등을 통해 위협의 수위를 감시하면서, 내부적인 취약성 위주로 이상 징후를 지속적으로 식별해 나가야 한다. 심리전과 여론전은 매체를 주로 활용하므로 중국 언론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사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국 자금이 국내 단체 및 언론사 등을 지원하는 경로 등을 확인해야 한다. 법률전은 학술 세미나 등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의 연구 추이와 최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를 식별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준군사적 강압은 중국의 정규군 외에도 경찰, 민병대 등의 조직 편성과 인원 증감 등을 지속 확인하여 우리에게 미치는 위협을 판단해야 한다.

둘째, ‘억제’ 단계에서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PMESII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심리전에서는 경제적인 압박에 대한 억제로서 대(對)중국 경제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노력하되,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경제의존도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입된 경제협력체들과 연합하여 유사시 필요한 대체재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위협에 대한 사회와 기업의 상황인식과 투명성이 중요하므로 국가적인 소통을 통해 경제적 압박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갖추어야 한다.

외교적인 압박으로 재중 한국인 부당 대우, 한국에 대한 출입국 제한 조치⁶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압박 등이 행해질 수 있다. 재중 한국인 차별, 출입국 제한 등 국민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외교적 차원에서 강한 항의와 우리나라 국민과 국제사회가 이를 알 수 있도록 각종 매체 등을 활용하여 전파하고 협력함으로써 중국의 압력이 축소되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한 압박에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정치조직 또는 정당의 지원금에 외국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정치적인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거짓 정보 유포를 통한 혼란 조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단순히 협력뿐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담조직 편성을 통해 각종 매체를 비롯한 네트워크상 허위 정보들을 식별하여 차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외국자본 또는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분열을 유도하는 특수 이익집단을 가려냄으로써 거짓정보 등을 활용하여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활동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는 것은 조작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는 대국민 차원의 전략 커뮤니케이션도 필수적이다.⁶⁵⁾ 또한, 거짓 정보 유포를 위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군 협력하 조직을 보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군사력 강화 및 과시를 통해 압박을 가할 시에는 이러한 압박이 오히려 한국의 전력 증강 필요성을 더욱 강화하므로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미군 전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전체적인 군사력 강

64) 표나리,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3전의 전개: 한국에 대한 함의.”, p. 19.

65) 대만은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기 위해 “역외세력대리인초안”, “국인5법”, “반침투법” 등의 법안 제정하여 외국자본 유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전략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초·중등학교 국방교육 교재를 통해 현대전 양상과 허위정보의 위험성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조직과 민간조직이 활동하고 있다.(위홍위,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한 연구 - 양안 정보전 사례와 대만의 대응을 中心으로.”, pp. 112~125.)

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론전에 대한 대응은 거짓 정보 여과를 위한 전담조직이 여론전에 활용되는 매체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담당하여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대응하고, 전파된 가짜뉴스들에 대하여 올바른 정보로 바로잡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의 법적 제재와 대국민 소통도 수행해야 한다. 중국의 언론사는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이므로 중국 사회나 국제사회의 여론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하여 역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축적해야 한다.

법률전에 대한 대응은 법적 전문가와 학자들을 활용하여 전담조직을 편성하여 진행 가능성이 있는 분쟁(서해, 이어도 등) 외에도 잠재적인 분쟁(북한 불안정사태, 중국의 북한지역 군사력 투사 등)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국제사회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지지를 공고히 해야 한다.

준군사적 강압에 대해서는 군사력 강화를 통한 역제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군사력 강화에 더하여 중국의 해상민병대처럼 우리도 준군사 조직을 편성하여 우리나라를 방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해상 중국의 해양 경찰 또는 민병대와의 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해양경찰 전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육군의 비상근 예비군처럼 해군의 예비군 조직을 활용한 행정구역 단위 해상 방위대를 조직하여 해상 보호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숙고해야 한다. 또한 해적 등 민간 조직에 의해 국민이 피랍되었을 때 군사력을 활용하여 구출해내는 것과 같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가해질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는 상대가 비군사 조직이든 준군사 조직이든 구분하지 않고 즉각 군사력을 투입하여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테러 발생시 테러 전담조직인 국방부 소속 대테러 특공대는 군사시설 외에서도 지원요청과는 무관하게 즉각 투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⁶⁶⁾ 소속이 모호한 시위대에 대해서는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66)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2022. 11. 1.) 제18조 4항에 근거하여 상황이 긴박할지라도 군사시설 외의 테러에 대해서는 주관 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으면 군 대테러특공대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황조치에 대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공권력 투입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협이 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공유를 통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와 정당성을 확보토록 해야 한다.

위에서 논한 중국의 삼전과 준군사적 강압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표 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4>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억제 방법

구분	분야	억제방법	
심리전	경제적 제재 및 압박	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중국 경제의존도 감소를 위한 정부와 기업의 노력(다중 공급망 확보, 자원의 다양화) 경제협력체를 활용한 대체재 확보 노력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상황인식을 위한 국가적 소통 활성화
	외교적 압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정치조직(정당)에 대한 외국자본 유입 금지
	거짓정보 유포	Inf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 자본(지원)을 이용하는 특수 집단 모니터링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의 협력하 전담조직을 통한 허위정보 식별 및 차단
		Infr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버 공격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직 및 제도 보완
군사력 증강 및 과시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맹 강화 및 우리의 군사력 강화 	
여론전	왜곡 보도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내외 국가차원의 소통을 통한 국민 신뢰 강화 왜곡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제재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왜곡 보도 여과를 위한 모니터링
법률전	국내법 변경 및 국제법 해석왜곡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사회 지지를 기반으로 국제기구 등에서 우리의 입지 강화
		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자 및 전문가그룹을 활용한 학술적 근거 확보
준군사적 강압	준군사 조직활용	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군사조직을 활용한 국가 방위
	테러 및 시위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공권력 사용의 법적 보장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시위 및 테러 시 상황공유로 사회지지 확보

셋째, 억제에도 불구하고 적의 하이브리드 공격이 식별되었을 경우 PECIM을 활용한 적극적인 ‘대응’ 단계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심리전에 대한 대응으로서 경제분야(E)에서 경제적인 제재에 대한 대응(E)으로서는 동일한 경제적 압박 효과를 내지 못하더라도 그에 상응하여 중국에 대한 경제적 제재(수출입 통제, 여행 금지 등)를 시행하고, 국제 경제협력체를 이용하여 국제적 차원에서 경제제재를 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차원의 국내기업 지원방안도 시행되어야 한다. 외교적인 압박으로 재중 한국인 차별, 출입국 금지 등 국민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정치적 차원(P)에서 강한 항의와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들에 대한 대우도 이에 맞게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외교적 역량을 동원하여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국제사회 고립을 이끌어내야 한다.

여론전에 대한 대응으로, 민간분야(C)에서 학자들을 여론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과 같이⁶⁷⁾ 우리도 학자들을 통한 학술적인 접근은 물론이고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해 적극적인 역여론전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정보분야(I)에서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오보와 거짓 정보 유포를 바로잡고,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여 상대의 공격 수단을 제거해야 한다.

법률전에 대한 대응은 정치분야(P)에서 기존에 준비한 법적인 근거를 추가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의 지지를 기반으로 국제법적으로 중국의 의도를 저지하고, 분쟁화되지 않도록 역법률전을 펼쳐야 한다.

준군사적 강압에 대해서는 중국이 준군사적 강압을 시행하는 즉시 정보분야(I)에서 공식적인 우리나라 입장을 공표하고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역여론전 차원의 대응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임계점에 도달하면, 단순히 입장 표명 및 언론 대응 등의 비물리적 수단만 활용하는 것이 아닌, 군사분야(M)에서 준군사 조직을 활용한 물리적 대응과 정규군을 직접 투사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들을 알

67) 박창희 외, “동아시아 국가들의 Hybrid전 대비전략 연구.”, p. 76.

아보았다. 이에 더하여 우리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해 수단과 방법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비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법률전의 일환인 잠재적인 분쟁 대비 외에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문화적 동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같은 민족이며 하나의 나라로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유사시 중국보다는 우리나라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이 문화·경제적인 개방에 동참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하며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우리의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강제해야 한다. 또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준군사적 강압에 대비한 우리 군의 임무를 명확히 설정하고 부여함으로써 제국력요소를 통합하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하이브리드전 양상을 분석해 보고, MCDC(다국적능력개발실험)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전략을 활용하여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 우선 중국의 대한반도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① 정부와 사회기능 유지, ② 하이브리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구비, ③ 하이브리드 공격을 제압하는 것으로 전략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임계점은 공격방법과 공격받는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하나, 군사력 사용의 임계점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위협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한 대응방법과 수단은 탐지-억제-대응이라는 대하이브리드전 틀을 적용하여 단계별로 실질적인 대응방법과 수단을 시행한다. 먼저, ‘탐지’ 단계에서는 감시와 식별의 방법을 적절히 혼합하여 정보수집과 징후 식별을 해야 한다, 둘째, ‘억제’ 단계에서는 PMESII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각 분야별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대응’ 단계에서는 PECIM을 수단으로 하여 삼전과 준군사적 강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틀을 적용하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될 것이므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세분화된 대응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또한, 각 분야별 임계점 설정과 대응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체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그리고 군사력 건설 방향에 있어서도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응하는 동시에 북한의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전력을 구상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회복탄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므로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를 향상하기 위한 국가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새로운 제도와 조직을 만들 기보다는 기존 제도와 절차 등을 조정하고 보완하여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론에서 기술한대로 “전쟁은 정치의 수단”이라는 전쟁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다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것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단 중 부가적이었던 분야, 즉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각종 수단이 오늘날 과학기술 발달로 기존의 살상 무기를 능가하는 파급력을 갖게 됨에 따라 주요 수단으로 부상한 것이다. 따라서 이전의 패러다임에 갇혀 눈에 보이는 살상만이 살상이라는 판단을 해서는 안되며, 이전에 가볍게 무시하거나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아 간과하던 수단(기만, 선동, 심리전, 인지전 등)에 과학기술이 더해지면서 큰 위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대비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다.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하이브리드전에 대한 다양한 대응방법이 연구되고 구체화되어 국가적으로 실행되는 단계까지 이어져서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남철, “강대국들의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과 주요 사례.” 『군사학논총』제11집 제2권, 2022.
- 김재엽, “‘전쟁 이외의 전략 도전’으로서 중국의 삼전(三戰): 특징과 사례,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의 시사점.” 『신아세아』 29권 1호, 2022.
- 김창곤, “한반도 주변의 회색지대(the Gray Zone) 위협과 대응방향.” 『군사연구』 제149호, 2020.
- 노병천, 『도해 손자병법』, 서울: 연경문화사, 2012.
- 박병권, “중국의 하이브리드전 수행 전략.”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0.
- 박창희, 『군사전략론』, 서울: 플래닛미디어, 2013.
- 박창희 외, “동아시아 국가들의 Hybrid전 대비전략 연구.” 『국방정책 및 군사전략』, 논산: 국가안정보장문제연구소, 2020.
- 박향기, “중·일간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 연구.” 『군사연구』 제139호, 2015.
- 새뮤얼 헌팅턴 지음, 이희재 옮김,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2016.
- 손한별, “2040년 한반도 전쟁양상과 한국의 군사전략.” 『한국국가전략』통권 제 13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2020.
- 육군 교육사령부, 『미래 작전환경분석서』, 대전: 육군 교육사령부, 2022.
- 윤석재, “중국의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 평가.” 『합동군사연구』 제30호,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2020.
- 이성현, “중국의 ‘여론전(輿論戰)’과 언론의 역할 평가: 한국의 사드 배치결정을 중심으로.” 『정책브리핑』 2016-31, 성남: 세종연구소, 2016.
- 이지용, “중국 ‘초한전(超限戰)’의 군사전략적 의미와 한국안보에 주는 시사점 연구.” 『신아세아』 제28권 4호, 2021.
- 이지훈,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제30권 2호, 2014.
- 위홍위, “현대 하이브리드 전쟁에 관한 연구 - 양안 정보전 사례와 대만의 대응을 中心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차오량(喬良)·왕상수이(王湘穗) 지음, 이정곤 옮김, 『초한전(超限戰)』, 서울: 교우미디어, 2021.
- 최영찬, 『헨디한 미래전 핸드북』,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2024.
- 표나리,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3전의 전개: 한국에 대한 함의.” 『정책연구시리즈』

- 2022-10, 외교안보연구소, 2022.
- 합동군사대학교, 『중국 국방전략』, 논산: 합동군사대학교, 2021.
- 허동욱, 『시진핑 시대의 한반도 군사개입전략』, 성남: 북코리아, 2013.
- Arreguin-Toft, Ivan, "How the Weak Win Wars: A Theory of Asymmetric Conflict." *International Security*, Vol. 26, No. 1, The MIT Press, 2001.
- Cantwell, Douglas, "Hybrid Warfare: Aggression and Coercion in the Gray Zone." *ASIL Insight*, Vol. 21, Issue. 14, Americ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2007.
- Halper, Stefan A., *China: the three warfares*, Cambridge, New York: University of Cambridge, 2013.
- Hoffman, Frank G., *Conflict in the 21st Century: The Rise of Hybrid Wars*. Arlington, VA: Potomac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2007.
- Hoffman, Frank G., "Hybrid vs. compound war. The Janus choice: Defining today's multifaceted conflict." *Armed Forces Journal*, 2009.
- MCDC, *MCDC Countering Hybrid Warfare Project: Understanding Hybrid Warfare*, MCDC, 2017.
- MCDC, *MCDC Countering Hybrid Warfare Project: Countering Hybrid Warfare*, MCDC, 2019.
- Orinx, Kimberly and Tanguy Struye Swielande, "China and Cognitive Warfare: Why Is the West Losing?" In the NATO-STO collaboration support office, *Cognitive Warfare: The Future of Cognitive Dominance*, France: NATO Innovation hub, 2021.
- "사드 압박 무력시위? 中, 군사 훈련 이례적 공개." 『MBC뉴스』 2016년 12월 3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16/nwdesk/article/4175916_30244.html(검색일:2024.3.18.).
- "중국군의 대만 주변 대규모 훈련, 기습공격 예고편일 수도." 『연합뉴스』 2023년 9월 1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915063400074?>(검색일:2024. 3.11.).
-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키고 도주한 중국어선 수배." 『연합뉴스』 2016년 10월 9일, <https://www.yna.co.kr/view/AKR20161009012900065?input=1195m>(검색일:2024.3.19.).

“China's New Spratly Island Defenses.” 『AMTI(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2016년 12월 13일, <https://amti.csis.org/chinas-new-spratly-island-defenses/>(검색일:2024.2.21.).

“中, 남중국해서 비정규 해양민병대 ‘리틀 블루맨’ 운용.” 『연합뉴스』 2021년 4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_20210413129300009(검색일:2024.2.21.).

“中, ‘어민 사망’ 대만 사과에도 진면 순찰... “더한 조치도 가능.” 『연합뉴스』 2024년 3월 15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0315142651083?> (검색일:2024.3.18.).

Abstract

Korea' s Countering Hybrid Warfare Strategy Against China:
Focusing on MCDC' s Countering Hybrid Warfare Project

Sook Yung Kim(Joint Forces Military Univ.)
Young Chan Choi(Professor, Dept. of Military Strategy,
Joint Forces Military Univ.)

As technology develops, the future battlefield will become more ambiguous and various means of warfare will be integrated and operated. The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located between powerful countries such as China, Russia, and Japan, is increasing, an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it will be used as a stage for a new war. Recently, China is viewed as a new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 due to its policies such as the 'Chinese Dream' and 'One Belt, One Road' and its military increase. In this paper, we looked at hybrid warfare, which is a changed aspect of warfare, and analyzed China' s hybrid warfare, 'Unrestricted Warfare' and 'Three Warfares' , which posed a great threat to us. In addition, we predicted China' s hybrid warfar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roposed a countering strategy for China' s hybrid warfare based on the MCDC (Multinational Capability Development Experiment)' s countering hybrid warfare project.

Keywords: Hybrid Warfare, China, Unrestricted Warfare, Three Warfares,
MCDC

투고일: 2024년 7월 2일, 심사일: 2024년 7월 26일, 게재확정일 : 2024년 8월 10일